

남구의회 제274회, 제275회, 제276회 임시회 열어

남구의회(의장 이강영)는 7월 한 달동안 세차례에 걸친 임시회를 열어 열편 의정활동을 펼쳤다.

지난 7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274회 임시회가 열렸고, 7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75회 임시회가,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76회 임시회가 열렸다.

의회는 7월 5일 열린 제2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을 처리하였으며, 이어 백석민 의원은 ‘남구인사에 원칙과 기준이 있는가?’, 강건우 의원은 ‘집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산남구사랑 상품권 도입의 필요성’, 박구슬 의원은 ‘분류식 하수관로 사업 누락 지역의 공사시행 촉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7월 12일 열린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을 처리하였으며, 이어 백석민 의원은 ‘남구인사에 원칙과 기준이 있는가?’, 강건우 의원은 ‘집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산남구사랑 상품권 도입의 필요성’, 박구슬 의원은 ‘분류식 하수관로 사업 누락 지역의 공사시행 촉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상임위원회 안건심사로 운영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7월 15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시켰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서성부)는 7월 15일, 16일 이틀간 화부원 안전에 대해 면밀한 심사를 이어갔으며, 주민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 허미향)는 7월 15일 ‘부산광역시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시켰다.

제275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7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

회별 심사를 거친 10건의 안건이 의결되었고, 이 날 서성부 의원, 박미순 의원, 허미향 의원이 발의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기립표결을 거쳐 모두 부결되었다. 표결결과 는 서성부 의원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찬성 7표, 반대 1표, 기권 6표, 박미순 의원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찬성 7표, 기권 13표로 집계되었다. 이어 김철현 의원은 ‘이른바 지역화폐의 허(虛)와 실(實)’의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또한, 7월 25일 열린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을 처리하였으며, 이 날 서성부 의원, 박미순 의원, 허미향 의원이 발의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기립표결을 거쳐 모두 부결되었다. 표결결과는 서성부 의원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찬성 7표, 기권 7표, 박미순 의원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찬성 2표, 기권 12표로 집계되었다. 이 날 박미순 의원은 ‘누구를 위한 남구인가...’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지난 제275회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에 따른 의회사무국 의정집 신설로 의정전문위원회 간사를 명확히 지정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수정가결)

—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의정발전을 위한 관심분야의 연구단체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정책개발과 입법 활성화를 도모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법적 근거와 구성원의 명칭을 명확히 하여 의회운영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관련 규정 일부를 개정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갈등 예방 및 소통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최근 발생하는 민원의 집단화·장기화로 소통을 통한 갈등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적극적으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과 열린행정을 통해 구정의 신뢰 회복에 기여

▲2019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문헌1동 공유주차장 조성)(원안가결)

— 문헌동 54~59번지 일원은 고지대 발달, 주택 등 밀집지역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도로의 상시적인 불법주차로 인해 차량 통행에 어려움이 많은 곳으로 노후 주택·폐공장·나대지 매입 등을 통해 공유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

▲2019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

재산관리계획 변경안(우암동 청사 변경 건립)(원안가결)

—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원안가결, 2018.09.17.)을 득한 ‘우암동 청사 건립’건에 대하여 우암동 청사 건립부지에 생활SOC사업 공모를 통해 국·시비를 확보하여 행정복지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생활문화센터를 복합 건립함으로써 주민에게 편의성(행정·복지·보건시설 원스톱 이용)을 제공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장기근속 사회복지사에게 사회 복지 전문 인력으로서 직업적 자부심 고취 등 처우개선을 위해 장기근속휴가의 근거를 마련

▲부산광역시 남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및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 생활환경의 변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아토피질환에 대한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부산광역시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 동 주민센터 주민자율방역단의 구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신종 매개체로부터 감염병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

5분 자유발언

남구인사에 원칙과 기준이 있는가?



백 석 민 의원
(문헌1·2·3·4)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민선7기 박재범 구청장의 “평화가 미래다. 사람이 희망이다.”는 구청 비전]이 선언적인 것이 아닌, 실질적인 도약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따라서 인사는 공정성과 민주성, 효율성의 원칙을 벗어 나지 않고 당사자의 동기를 유발 시킬 수 있는 인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1일자 단행한 “2019 하반기 국장급 인사발령 사항”은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되지 않은 공무원, 즉 승진후보자 명부에 없는 공무원을 직무대리로 임용한 것으로 인사의 공정성이 결여된 잘못된 인사행정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760여명의 남구 공무원과, 지역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의회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집행부에 대한 비판과 감시, 그리고 견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동안 본의원은, 인사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 다만 조직에 있어 사람을 관리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급변 인사에 대한 공무원들의 불만과 이에 대한 관련 근거를 찾아보면서 구청장의 과도한 인사권 남용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 38조(승진)사항을 보면,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를 두고 있으며 5급은 4년 이상이 된 사람에 한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게 되어 있고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 에 있는 사람부터 일정한 범위에서 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인사에서는 근무연수가 4년이상을 충족한 사람이 있었음에도 2명에 대한 4급 승진이 근거 없이 배제됨과 동시에 10명 이상의 직원들이 5급, 6급, 7급, 8급으로의 승진이 연속으로 누락되어 직원사기가 크게 저하되었고, 또한 국장 자리를 직무대리로 임용하였는데, 직무대리는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기 아니하도록 하고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규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급변 인사발령시 “사고”는 무엇이며 어디까지 인지 너무나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를 인사혁신처 직무대리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지난 7월 1일자 국장급 인사발령 사항’은 재량권 남용으로 우호적인 집단을 챙기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이라 추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인사

시스템이라도 의욕만을 앞세워 일방적인 인사를 한다면 공무원들은 구청장 눈치 보기에 급급할 것입니다. 구청장 인사권은 보장됨과 동시에 원칙은 공무원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구 인사행정이 공정성 훼손 등 인사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일선에서 일을 하는 직원들의 사기는 떨어지고, 우리 남구 정책집행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 또한 바닥을 치게 될 것이며, 새로운 남구에 대한 어떠한 감동도 없을 것입니다. 현재, 급변 인사에 대해 공무원 노조는 연일시위를 하고 있고, 더불어 의회차원에서도 감사 청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사행정정은 공정한 승진과 적체적소의 인사배치를 통해서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기회를 부여하고 조직에서 승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법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선언하고 있어 효율성, 민주성, 형평성의 이념을 보다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공공조직은 민간조직과 달리 공공가치의 실현을 위해 존재 해야 하며 인사행정에서는 공무원의 권익보호 측면도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박재범 구청장님이 지혜로운 분이라면, 본 의원의 오늘 발언이 우리 남구 인사행정을 한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부산남구사랑 상품권 도입의 필요성

이것이 국가 경제는 발전하지만 서민경제가 갈수록 힘들어져 가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을 통해 지역경제의 자금이 매년 수조원이상 서울과 수도권으로 블랙홀처럼 빨려 올라가는 구조에 있습니다.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지방에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부어도 지역경제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지역상권의 매출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방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남구에서만 사용가능한 지역화폐(지역상품권)의 도입입니다. 현재 전국 243개 지자체 중 69개 지자체가 도입하여 80% 이상의 성공을 거두었고 73개 지자체가 도입을 추진 중이라는 것은 실패한 지자체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발행비용의 4%나 지원하고 있으므로 우리 남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증대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빠른 도입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경기도 성남 시흥과 같은 우리

와 유사한 도시형 지자체에서는 2018년 30억의 지역화폐 발행 유통으로 14억원의 역외소비가 감소되었고, 2019년 상반기 200억의 지역화폐 유통으로 90여억원의 역외소비감소를 이루는 성과를 냈으며, 역외소비 감소에 따른 취업유발효과도 민간과 공공을 합쳐 247명으로 나타났고, 2020년 이후 450명 이상의 취업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의 경우 2017년과 2018년 2년동안 2,300억원의 지역화폐 유통으로 9,000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거두었다는 통계가 있으며 우리구와 규모가 비슷한 인구 27만의 군산시의 경우 2018년 910억원에 발행하였는데 불과 4개월만에 전액 판매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역화폐 정책은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경제가 어려울 때 항상 써왔던 정책인데 왜 검증되지 않았다고 하는지? 그리고 2달이 넘는 기간동안 상임위에 집행부,의원들끼리도 치열하게 토론을 했는데 언제까지 검증은 거쳐야한다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달여동안 검

증을 거치는 기간 중 부산시에서는 지역화폐가 통과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 투입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3억대비 30억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이 과연 있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행 10년차인 전통시장만을 대상으로 하는 온누리상품권과 장애인, 유증업소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화

페는 본질적으로 비교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및 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계약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임금, 보수, 공사·용역 대금은 지역상품권으로 지급이 불가하여 역시 지급에 따른 피해는 전혀 발생하지 않으며, 소위 ‘깡’으로 불리는 부정유통에 대해서는 개인 할인가매입 한도액을 40만원으로 한정하고 상품권 발행 및 유통시스템을 구축하여 상품권 일련번호를 모니터링과 필터링으로 불법 유통 가맹점은 바로 적발이 가능하고, 불

법유통 가맹점으로 적발 시 가맹점 취소 및 재지정 제한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 되어 있습니다.

지역화폐에 관해서 현재 의회에서는 2달이 넘게 치열하게 논의 중입니다. 하지만 치열한 논의도 좋지만 너무 늦어진다 면 안하는 것 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조금 더 최선을 다해서 당리당략이 아닌 주민만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남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류식 하수관로사업 공사 촉구

습니다.

이렇듯 일부 누락 지역은 분류식하수관거 공사를 할 구간이 짧아 민자투자방식인 BTL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보다는 시 재정투자방식으로 부산시 관할로 혹은 예산을 편성하여 남구청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유로 현재 대연, 문현일원과 동천수계일원은 재정투자로 공사추진 중에 있으며 우암동 일원 450m구간은 해충 및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을 사유로 구비로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연교차로 인근 하수관로 정비사업 누락지역은 대연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에서 2017년 12월 13일자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이 고시되면서 정비구역 해제가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UN관광특구의 중심입니다. 유연교와 석포교가 만나는 오거리 교차로로 재개발 대상지와 정비구역 해제 지역을 제외하고는 하수관로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설계된 차집관로 관경이 협소하고, 이 일대의 지대가 낮아 우천시 마다 용량을 감당 못하고 우수가 역류하여 도로가 침수되고 인근주택에 가지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구 교통소통대책 마스터플랜 수립’ 2018년도 8월 자료에 따르면 유연교차로 일원은 매일 4,587대 의 차량이 지나다는 걸목입니다. 이제 여름입니다. 우천시 의 도로침수를 떠올리고 4,500여대의 차

량이 침수지역을 지나간다고 생각해보십시오. 바로 착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하수관로 분류사업의 시행이 어렵다면 하수관거의 대응용 교체 를 시행하거나 측구정비 등의 대안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 건설과에서는 지난 2018년 12월에 분류식하수관로 완료지역 내 배수설비 미설치 구간을 파악하여 이미 부산시 생활하수과에 제출한 바가 있으나 지난 6월, 2회 추경에서 이를 위한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구 재원을 투입하기 보다는 부산시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지속적인 구민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남구청 주관의 사업으로 진행 될 경우 그간 민간투자자 진행될 때 조속히 처리되지 않았던 각종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분류식 하수관거 공사는 주민을 위한 사업임에도 사전 주민홍보 부족으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고, 부산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다보니 사업완료 후 마무리과정에 서 임시포장블랑, 주택으로 오수역류가 되는 등 각종 주민피해가 발생하였으나 남구청에 감독권이 없어 즉시 시정이 안되는 등 문제점이 많았다고.

주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사업시행 해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른바 지역화폐의 허(虛)와 실(實)

하는데 국가가 발행하는 법정화폐와 달리 지자체가 발행, 관리까지 맡는 일종의 상품권입니다.

하지만 지역상품권의 전망이 밝지만 한 것은 아닙니다. 강화군을 비롯한 몇몇 지자체는 이미 지역상품권 발행 중단을 선언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역상품권은 지자체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관 주도 지역경제 순환형 모델이 대부분입니다. 지자체 장이나 정치적 환경이 바뀌면 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지류형(종이) 화폐

이기 때문에 판매, 환전수수료 및 발권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지자체에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부산 남구의회에도 5월 임시회에 지역상품권 관련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이에 남구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으로서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예산낭비도 이런 낭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상품권과 유사한 온누리 상품권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3면 계속〉



김현미 의원



고선화 의원



김철현 의원